

# “보수·진보 손잡고 국기문란 ‘5·18 왜곡’ 뿌리 뽑아야”



“헌정질서 파괴 못참아” 강운태 광주시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은 헌정질서파괴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보훈처장 사퇴하라” 30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당·광주시 5·18 왜곡 대책위 토론회

최근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과 광주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격양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와 광주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 오승용 연구교수는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문민·민주정부의 등장은 보수세력에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세력의 결집과 함께 한국 보수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보수관 역사바로세우기의 핵심이 5·18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5·18을 폄하하는 세력은 1980년 항쟁 당시 신군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근거해 기본적인 사

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처와 근거가 없는 개인의 의견, 확인 불가능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목적은 5·18 항쟁을 복이 개입한 불순분자들의 국가질서 문란 폭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본인들의 원죄의식과도 같은 과거 독재정부를 반공주의 회복을 통한 국가정체성 수호세력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5·18 왜곡 현상은 보수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극단적이고 편협적인 일부 보수의 퇴행적인 행태”라며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극단적’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이용한 처벌이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극단적 사례는 법적 수단 이용 처벌해야 인터넷 등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 관심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대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5년 반WTO시위가 열린 홍콩을 비롯해 대만에서도 불릴 정도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자국 언어로 번역돼 알려진 아시아의 인터내셔널가”라며 “광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보훈처의 일면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이경남 효덕감리교회 목사는 “5·18의 핵심 원인은 당시 신군부의 집권욕과 진압군의 상상을 초월한 난폭한 진압에 있다”면서 “최근 보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이나 김대중 내란음모세력의 사주,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설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 인사말에서 “5·18이 세계 민주·인권 항쟁사의 빛나는 역사로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보수세력은 여전히 5·18을 왜곡·편향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5·18 관련 왜곡이 인터넷 등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5·18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세계의 역사”라며 “근래의 5·18 왜곡 시도는 단순히 5·18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도 인정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부터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방부, 문서로 명확한 입장 밝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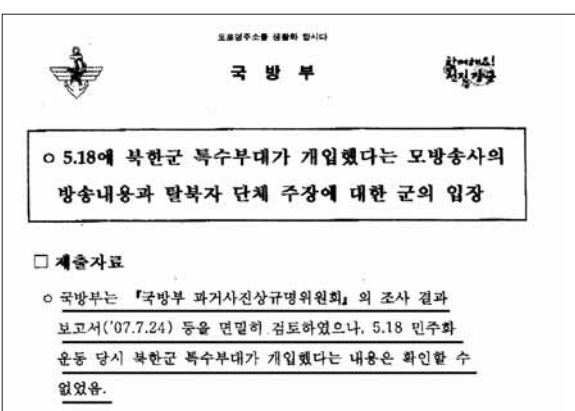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도 ‘5·18 북한군 개입설’ 애매한 입장

국방부가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어 30일 광주시에 보낸 공식공문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의 개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자칭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반대의 의미로도 이해·해석될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침투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과 관련, 국방부 과거 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2007년 7월 24일)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5·18 관련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 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부인론, 특정 사이트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회가 5·18 관련 1400건, 14만1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수집·조사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도 갑자기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과 만나 “5·18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국방부 공식 입장과는 달리 명확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광주시에 공식 공문을 보낸 것도 강 시장이 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5·18 행사위 “전국 연대로 왜곡 세력 단죄”

##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18 왜곡저지 국민행동’ 발족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5·18 역사 왜곡과 관련, 전국적인 대책 기구를 발족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3주년 행사위)는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18 왜곡저지 국민행동’(가칭)을 발족, 5·18 역사 왜곡 세력 단죄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3주년 행사위는 5·18 왜곡저지 국민행동 발족 이후 박승준 국가보훈처장 사퇴와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 채널 허가 취소 및 관련자 문책,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 촉구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또 광주시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민주당 대책위 등과도 협력하

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5·18 왜곡과 폄하가 난무하는 것은 학술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단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학술 책임자들의 주정급 환수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종편의 ‘북한 배후설’ 보도 등 올해는 5·18이 뜨거울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국민에게 5·18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33주년 행사위는 다음달 5일 광주 지방보훈청 앞에서 박승준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일엔 서울에서 전국적인 대책기구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 5·18연구소와 교수평의원회 등 전남대 교수들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한 종편과 일 부 언론, 특정 사이트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라사랑은 나무

## 6월은 호국보훈의 달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뜻 깊은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위대한 업적을 되새기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념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바탕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경제대국, 그리고 문화강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아 꽃다운 젊음과 목숨을 바친 6·25전쟁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

불의에 항거한 민주유공자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충성에 대하여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유가족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대군인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어겠습니다.

특히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이자 UN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 행사와 UN 참전국에 대한 다양한 보은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 흘렸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국제사회에 감사함을 표하는 성숙한 나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선열들의 애국과 헌신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소망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건한 안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국보훈의 달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모두 헌충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목련에 참여합시다.